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통일지향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발제자]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16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통일이란 ‘어떤 이유로 나누어진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다시 합치는 정치적 행위’이다. 통일한국의 체제선택의 기준은 통일 이전보다 통일 이후의 삶의 질이 더 나아야 하며, 자유, 민주, 평화, 인권, 공영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잘 구현되어야 한다. 선택의 기준은 체제도 진화·발전한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발전의 경험적 사실이 준거가 될 수 있다. 통일은 형식에 따라 합의통일과 흡수통일, 방법은 평화통일과 전쟁에 의한 통일, 속도에 따라 급변과 흡수통일로 구분된다. 물론 가장 이상적 합리적 통일방안은 합의, 평화, 점진적 방법을

통한 통일이다. 하지만 체제가 너무도 다른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이 방법은 비현실적이다.

■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은 통일 준비 및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즉 분단 해소를 통해 가치지향의 통일한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통한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치 지향의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합의의 대내정책, 북한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 통일지향의 통일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통일은 체제선택의 문제다

- ◆ 통일이란 ‘어떤 이유로 나누어진 국가를 하나의 국가로 다시 합치는 정치적 행위’이다. 그러나 통일은 정치체제가 다른 경우와 분단국의 지도자는 자국 중심의 통일을 달성하려는 지도자의 야망, 국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물론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지리적 측면에서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의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정치체제의 단일화’이다. 즉 어떤 정치체제로의 단일화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통일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語義)’에서 찾을 수 있다. 즉 통일은 나누어진 상태를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에서 분단 ‘현실의 부정’이며, 합쳐서 통일국가를 지속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지속’이다. 바로 통일은 어떤 현실(정치체제)을 부정하고 어떤 현실(정치체제)을 지속할 것인가 하는 정치체제 선택의 문제다.
- ◆ 통일한국의 체제선택의 기준은 통일 이전보다 통일 이후의 삶의 질이 더 나아야 하며, 자유, 민주, 평화, 인권, 공영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잘 구현되어야 한다. 선택의 기준은 체제도 진화·발전한다는 점에서 인류 역사발전의 경험적 사실이 준거가 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시장경제, 다양성 존중 등이 기반인 체제는 우성(優性)의 체제이고, 전체(독재)체제, 사회주의계획경제, 획일화 등이 기반인 체제는 열성(劣性)의 체제라는 것을 역사는 입증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 과정에서 우성의 체제를 선택하고 열성의 체제는 거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기준이고 결정이다.
- ◆ 통일은 형식에 따라 합의통일과 흡수통일로, 방법은 평화통일과 전쟁에 의한 통일로, 속도에 따라 급변과 흡수통일로 구분된다. 물론 가장 이상적 합리적 통일 방안은 합의, 평화, 점진적 방법을 통한 통일이다. 하지만 체제가 너무도 다른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비현실적이다. 독일 통일은 흡수(편입), 평화, 급변에 의한 통일이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구조와 한계

- ◆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 방식 등에 대한 행동지침’이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1994년 채택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논리적 근거는 경제적 교역을 통한 상호의존성을 증대시켜 평화를 가져온다는 평화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논리에 따라 점진적 단계적 변화를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합의통일을 완성한다는 통일방안이 마련됐다. 바로 ‘화해협력 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단계’의 3단계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선(先)통합 후(後)통일의 구도로 요약된다.
- ◆ 이 구도의 문제점은 남북한의 극단적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무시하고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誤認)하고 방법론이 합리적이라고 착각했다는 점이다. 즉 ‘계절의 옷’(=경제지원)으로는 ‘권력의 옷’(=체제전환)을 벗길 수 없고 오히려 ‘권력의 옷’(독재체제)이 더 두꺼워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방안은 민족이 통일의 연결고리이지만 남북은 민족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 즉 우리의 민족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한민족이지만 북한의 민족은 주권부재(主權不在)의 김일성 민족이다. 이처럼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여러 한계를 지닌 우리의 공식적 통일방안이다. 편의상 선(先)통합 후(後)통일 방안을 플랜 A 통일방안으로 한다.

◆ 플랜 B의 통일방안

- ◆ 플랜 A의 선(先)통합 후(後)통일 구도는 우리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플랜 B’ 통일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플랜 B’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고리가 ‘자유민주’이다. 실제 독일 통일과정이 ‘플랜 B’ 통일방안의 준거(role model)이다. 독일 통일은 ‘동독의 급변사태 → 동독의 민주화 → 통일 → 통합’의 단계를 거쳤다. 즉 서독은 동독 급변사태를 독일 통일로 연결했고, 독일 통일 이후 사회경제적 통합을 이룩하였다는 점에서 ‘선(先) 통일 후(後) 통합’의 구도라 할 수 있다. 물론 동독의 민주화는 ‘교역(접촉)을 통한 변화’가 아니라 동독 주민이 자력으로 쟁취했고, 동독의 민주화가 무혈혁명에 의한 최초의 평화통일이 가능하게 한 동인이었다. 사회경제 통합과정에서 서독 주민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다. 이처럼 동서독의 통일은 ‘선(先) 통일 후(後) 통합’의 구도로 완성되었다.
- ◆ 독일 통일이 현재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국민의 희생과 동참으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북한 민주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 무혈혁명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도자의 통일을 위한 해안과 정치적 결단력, 관료의 전문지식과 탁월한 임기응변 등이 요구된다.

◆ 통일지향의 대북정책

- ◆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은 통일 준비 및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대북정책을 의미한다. 즉 분단 해소를 통해 가치지향의 통일한국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통한 정상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가치 지향의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 합의의 대내정책, 북한 정상화를 위한 대북정책, 통일지향의 통일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려면 우선 북한체제의 특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체제는 하나의 절대적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이 모든 결 결정하는 전체주의 국가이며, 엘리트층에 대한 지속적 숙청과 복권으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는 독재사회이다. 또한 폭력과 연좌제가 일상화되고, 출신성분에 따른 계급 차별이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이다. 이처럼 북한체제가 유지되는 근원은 폭압기구, 정치범수용소 등과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폭압 체제의 변화 조건은 경제의 극심한 구조적 위기, 외부정보 유입, 체제 내부의 격심한 불평등의 확산 등이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부정보 유입이 체제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이는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체제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하는 방증이다. 그래서 북한 정보화는 더욱 중요하다.
- ◆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 정보화, 인도적 대북지원 및 교류 협력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북한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 우선 북한 정보화의 의미는 북한의 사상해방을 위한 정신적 지원(spiritual assistance)이다. 사상해방이 중요한 것은 북한 정상화의 첫 단추이고, 북한 민주화와 한반도통일이 무혈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정보화가 단순히 외부정보 유입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정보환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환류체계는 ‘외부정보 유입 → 전달된 외부정보의 북한 내 유통 → 북한내부 유통정보를 외부 세계로 전달 → 유입정보의 평가 → 정보 재유입’의 경로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체계의 구축은 유입정보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발적 복종의 불법성을 자각하기 위한 장치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유입되는 정보는 안전성, 신뢰성, 전문성,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계층과 지역 등에 따라 다른 형태의 정보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환류체계 구축을 위해 남북한 방송 동시개방과 KBS의 역할 제고, DMZ에서 대북방송 재개, 북한이 구축한 정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방안도 필요하다.
- ◆ 다음 민족공동체 복원을 위한 인도적 대북정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인도적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의 마음 얻기’가 목표이며, 이를 위해 식량은 육로, 다수 분할 지원, 소량 포장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야궁이 개량사업을 통한 에너지 지원, 탈북자의 적극적 보호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인권재단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배타적 행정권의 일방적 적용구조를 완화·차단할 방안을 마련해 경협 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접경 지역에 남북한 ‘경제공동특구’를 개발하여 남북 교류 협력을 정상화 해야한다. 북한 시장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관료의 국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해 주고, 북한 산업화를 위해 전략산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부흥계획’을 수립하고, 통일 이후 이들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 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